

완성차업계, 현지 생산·기술개발 주력… “관세부담 최소화”

산업계 전망

현대차그룹, 美 생산 본격 추진
GM 등 현지 기업 파트너십 활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 기간 동안 강력하게 내세운 부분은 ‘관세 정책’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도 관세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완성차 업계의 관세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현대차그룹은 미국 내 충분한 생산 거점을 보유하고 있어 관세 압박을 최소화할 것이라 진단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 기간에 수입품에 대한 10~20%의 관세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펼쳤기 때문이다. 중국산 수입품처럼 60% 관세율은 아니어도 한국 완성차 업계가 관세 부담에서 자유롭긴 어려울 것이라 관측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기아는 미국 내 생산 거점을 최대한 활용해 관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다만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현대자동차는 지난 9월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GM)와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당시 정의선 회장(왼쪽 네 번째)은 “현대차와 GM이 글로벌 주요 시장 및 차량 세그먼트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회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자동차그룹

다르게 책정될 수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현대차그룹은 기존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연산 36만대), 기아 조지아 공장(연산 34만대)에 더해 조지아주에 구축한 연산 30만대의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도 가능한 상태다. 이들 거점을 활용한 현지 생산을 통해 관세 폭탄을 피할 것이라 기대감이 나온다.

또 최근 현대차가 미국 3대 자동차 기업 제너럴 모터스(GM)와 신차를 공동

개발·생산하고 배터리 같은 공급망까지 공동 관리하는 포괄적 제휴 관계를 맺은 것과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 자율주행기업 ‘웨이모’와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 현지 기술 개발에 대한 부담감도 줄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라는 것은 부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전면 폐지하진 못해도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량 축소 등은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트럼프 선거에 올인한 테슬라의 엘런 머스크에게 보이지 않는 특혜 정책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운행허가 등 다양한 제도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결국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테슬라 전기차가 독주 체제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대차그룹의 마케팅 전략은 가성비 높은 전기차와 강력한 판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조합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며 “트럼프 2기 집권 시기가 시작된 만큼 단점이 크게 보이지만 냉정하게 판단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면 단점을 장점으로 회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트럼프 1기 행정부 고위 관료들을 영입한 만큼,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소통은 원활한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20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 국방성 법제처 차관보로 일했던 로버트 후드를 워싱턴사무소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올해 1월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주필리핀과 주인도네시아 대사를 맡은 성김전 대사를 고문으로 위촉하기도 했다.

현대차그룹은 트럼프 인맥과의 소통도 지속해 왔다. 지난 3월 트럼프 전 대통령 최측근이자 백악관 수석대변인 출신인 세라 허커비 샌더스 미국 아칸소 주지사가 방한했을 당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직접 만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정 회장은 샌더스 주지사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70억달러 칩스법 혜택 관전… 對中규제 ‘양날의 검’

반도체

바이든 행정부 천문학적 지원 약속
수혜 조건, 규모 축소 등 변수 우려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반도체 업계 선풍도 잡혀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천문학적 지원금을 받기로 한 상황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자국우선주의’ 기조로 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강력한 대중국 규제 실행이 예상되면서 우리 기업이 손해를 입을지 혹은 반사이익을 얻을지 한치 앞을 볼 수 없게 됐다.

7일 <메트로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팜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대선 승리 연설을 한 뒤 멜라니아 여사와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가장 큰 수출국으로 둔 한국 반도체 업계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새 국면을 맞을 전망

이다.

공화당 후보로 2기 행정부를 출범하게 된 트럼프 당선인은 다른 후보였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비해 더욱 강화한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정책을 내걸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 반도체 업계는 바이든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지원금의 축소 가능성이라는 악재와 강력한 대중 규제에 따른 양날의 검을 쥐게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바이든 정부가 시행한 반도체 법(CHIPS and Science Acts, CHIPS ACTS)에 대해 꾸준히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반도체 법은 지난 2022년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내에 제조시설을 설립하는 반도체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

공하는 법안이다. 총 2800억 달러의 투자금이 투입되는 해당 법안은 해외 주요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연구·제조시설 설립을 통해 미국내 반도체 산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법을 근거로 합쳐서 70억 달러(10조 원) 수준의 지원금 및 세제혜택을 받기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고 연구, 개발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미국 생산기지는 미국 내 고객사와의 만남을 수월케하고 영업을 위한 발판 역할까지 할 예정이었다.

한국무역협회는 리포트를 통해 “트럼프 재집권시 지원법이 지속될 수 있

지만 보조금 수혜 조건의 추가와 동아시아 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 축소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법의 수정 방향과 대중 제재가 맞물리며 오히려 우리 기업에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일본과 대만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고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만큼 오히려 우리나라가 프렌드쇼어링(우호국 내 생산)으로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법에 의해 선정될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에 적극 참여해 미국 주도 기술개발 협력 체계에 편입하되, 다른 국가와 독자 협력체계 구축을 병행해야 하는 게 과제”라며 “반도체 제조 기술이 동맹 보호 조치를 이끌어내는 ‘생존기술’로 가능하게끔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

무역 규제 등 정책대응 속도… 시장 다변화 ‘투트랙’

배터리·철강

수출입 비상대비 태세 갖춰

배터리와 철강산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트럼프 2기 정부의 경제 정책과 무역 규제 강화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와 철강업계는 경제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발 빠르게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배터리업계, 위기 대응책 고심

무엇보다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은 배터리업체다. 트럼프는 화석연료와 내연기관 자동차에 우호적인 만큼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와 미국 내 배터리 생산·판매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없애겠다고 대선 기간 중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국내 배터리업계는 전기차 보조금 축소 등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IRA에 따른 혜택을 받으며 영업이익에 AMPC가 반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금이 축소될 경우 수익성에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고 있어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기차 시장 둔화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미국 내 고물가의 원인이라고 비판하며 미국 내 화석 에너지 개발과 석유 및 가스 시추를 확대할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재집권으로 인한 재생에너지 관련 혜택 감소로 기업 타격이 우려된다”며 “IRA 지원 규모가 축소되고 전기차 보급이 지연될 경우, 국내 기업들이 미래 수익을 기대하며 추진한 미국 내 투자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 말했다.

현재 한국의 자동차와 배터리 업체는 미국 공장 설립 등으로 60조 가량을 투자하기로 약속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재집권에도 IRA 전면 폐기는 현실 가능성이 적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IRA 시행 이후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를 해온 만큼 정책을 바꾸기는 다소 어렵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트럼프의 재집권에 따라 중국 등 한국의 경쟁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환경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철강업계, “수출 전략 새롭게 짜야”

철강사들도 비상 대비 태세를 갖춘 것은 마찬가지다.

트럼프는 중국이 막대한 보조금으로 저가 철강제품을 과잉 생산해 무역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중국

견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폭탄은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을 촉진시켜 국내 철강사들에게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 2기 공약에 제시된 무역 관련 정책은 크게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와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10% 기본 관세 부과의 2가지가 핵심이다. 철강을 포함한 중국산 수입 물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60%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중국산 철강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관세와 수출입 규제 등 무역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외 시장 다변화하는 전략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했다.

/차현정 기자 hyeon@